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5. 22(수) / 총 2매(본문 2매)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윤진환, 서기관 최수관 • ☎ (044) 201-3835, 4996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자동차 리콜관련 제도 조속히 보완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늘(5월 22일) 감사원이 발표한 「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」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,
-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자동차 리콜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주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

① A회사 차량화재 사고 사전대응 미흡 관련

- 언론보도, 소비자 신고, 제작사 제출자료 등 결함사전 분석,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리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응체계를 갖추며,
- 결함정보 사전 수집분석을 위한 ‘결함정보분석시스템’을 금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환경부와의 결함정보를 사전 공유하며,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차안전연구원(KATRI)의 조사인력·조직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역량강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② 공개무상수리 권고 결정 부적정 관련

- 공개무상수리 권고 결정(9건)은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(심평위)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나, 해당 사안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리콜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심평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작사·부품사의 용역 등을 수행한 위원은 해당 업체 관련 안전에서 제척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③ 리콜 사후관리 부적정(시정조치 없이 판매, 대여) 관련

- 향후 리콜 대상차량이 시정조치없이 판매되거나 대여(렌트)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,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차량(7,010대)에 대하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작년 BMW 화재사태를 계기로 '18.9월 「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」을 마련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구축, 유관 기관 협업체계 구축, KATRI 결함조사 역량 강화 등을 추진중이며,
-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리콜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자동차정책과 최수관 서기관(☎ 044-201-499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